나는 누구이며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이봉범

<나는 누구인가?>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1990년 대학원에 입학하며 시작된 연구자로서 꽤 긴 시간 걸어온 나의 궤적을 성찰하게 만든다. 나는 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변혁 운동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학생운동의 경험과 1980년대 문학(연구)이 사회변혁 운동과의 연계 속에 진보적.탈지식인적 경향으로 변전하는 모습에 공감했던 때문이다. 특히 노동해방문학의 이념적 노선과 대안적 전망이 이 같은 낭만적 열정을 신념으로 굳히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노동해방문학(사)으로의 참여가 조직의 와해로 무산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게다가 생계문제에 봉착하면서 몇 년의 방황을 거친 뒤 다시 문학연구자로 (재)입문하는 곡절을 겪은 바 있다.

이후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문학연구가 무엇이고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명제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문학연구란 역사의 격랑 속에 묻혔거나 배제 또는 망각되었던 것들을 당시의 자료를 통해 더듬어 복원하고 기록하여 기억하게끔 만드는 일이라는 지침을 마련한 정도다. 이런 관점에서 검열, 매체, 냉전을 키워드로 문학텍스트를 종횡으로 둘러싸고 있던 사회제도적 맥락들과 언제나 그 중심에 존재했던 뭇 사람들을 복원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학계에 보탬이 될 만한 연구논문 한 편을 생산해내지 못했다. 또 여전히 20세기적 어떤 면에서는 19세기적 사유와 언어에 갇혀 있어 의미 있는 학술적 발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역부족을 절감하면서도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연구의 필요와 의의를 인정하는 처지에서 현대문학연구자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연구자로서 일상을 들여다본다. 강사지원서를 제출해 배정받은 강의를 하고, 연구재단에 제출할 기획서 쓰고, 연구논문, 석.박사학위논문 등을 심사하고, 이러저러한 세미나를 매개로 동료연구자와 더불어 공부하고, 더러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아르바이트 형태의 부업을 하고, 논문 한 편 쓰기 위해 자료들과 씨름하는 등등 매년(학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나 연구자로서 생존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일은 만만찮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논문(쓰는) 기계, 기획서(쓰기) 노예란 자조가 과장만은 아닐 것이다. 세속적 사람노릇은 뒷전이다. 그런데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별개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추상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문학 연구공동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흔히 교육/연구로 대별.포괄시키는 연구자 활동 영역 전반도 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수행된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일이나 이즈음 이런 재발견을 거치며 동료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각별해지고 너무나 많고 흔해서 흘려버리게 되는 논문 하나하나, 학술대회 공지들을 가급적 더 살피게끔 이끈다.

이 같은 자각은 자연스럽게 내가 몸담고 있는 연구공동체의 현황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 연구공동체는, 거칠게 말해, 대학(국문과 학부.대학원, 부설연구기관 등)-학회-연구자의 유기적 관계망으로 구성된다. 연구자 개개인의 포지션도 이 틀의 일정 지점에 위치하면서 생태가 규정된다. 그런데 딛고 있는 발밑을 보면 우리 연구공동체가 위기를 넘어 사회문화적 토대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징후가 역력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활력을 잃은 지는 꽤 오래전부터다. 무엇 때문일까?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진단과 대응의 자세가 제각각이나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현재의 입지조차 유지할 수 있는 방법적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다수 주체가 약자임을 고백.자처하며 무력감에 탄식한다. 자기 위치를 보존하는데 급급한 모습도 없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사태를 수수방관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위기감과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제도와 이로부터 파생된 관념, 관습(행), 문법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교집합이 존재한다. 현재로선 이 지점이 갱신의 유일한 발판인 것 같다. 본 현대문학자대회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연구자 개개인은 약자이나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론화시켜 (실질적)연대를 이루어내면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비정규직 강사로서 몇 마디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너나 잘 하세요”란 자기 주문을 전제한 상태에서).

현 연구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양하고 대내외적으로 걸쳐 있다. 또 그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 연계되어 구조적으로 작동하면서 강도를 심화시킨다. 한국사회의 변동에 따른 객관적 요인이야 피할 수 없다. 가령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구조 개혁의 여파로 국문학과(대학원)가 제도적 분과학문으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축소되는 추세에 대응할 묘책은 없다. 이미 지방대의 국문학과 상당수가 폐과.통합되는 수순을 밟았고 그 흐름이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 닫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최근 교육부가 2년 뒤 대학입시에서 수도권대학 정원의 20%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하는 방안(대학혁신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 추

세가 가속될 것이다. 폐과가 되지 않더라도 국문학과는 한국어교육이 먹여 살리는 형편이라고들 한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수세적 방어책밖에 없을 듯싶다. 수백에 이르는 현직 현대문학전공 교수의 능력에 기대어본다. 아니 자기자리 보존을 위해서도 분투할 것이라고 믿는다(경멸이 아니라 기대의 표현이다).

범위를 좁혀 연구공동체를 위협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관학협동체제, 즉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공동체의 관계 문제다. 1960년대 후반 한국학술의 근대적 제도화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관학협동체제는 1981년 4월 한국학술진흥재단 설립과 이후 준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으로의 개편을 거치며(2009.6)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정책과 학술연구계의 협력/긴장관계를 동력으로 한국학술이 양.질적으로 확대.발전되어 온 성과는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된 점도 성과 못지않게 크다. 무엇보다 연구공동체의 생태를 교란시킨 점이다. 그 대상은 연구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며 장기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대문학연구(체) 전반이 연구재단이 부과한 틀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연구재단의 학술(지원)정책은 현재 연구자 개개인의 지속가능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는 장치이다. 자발적 참여이든 동원이든 모든 연구자는 주기적으로 연구재단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 결과가 연구 활동 전반을 좌우하는 형편이다. 취업이 안 돼 더 가난한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의 생명력을 위협할 정도다. 수혜를 받지 못하면 모멸감, 자괴감, 박탈감 등으로 신음한다. 이를 위무하는 일은 각자의 몫이다. ‘기획서(쓰기)의 노예’, 이 모진 자조는 이젠 너무나 익숙한 우리네 모습이다. 대학(원) 및 학회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원)은 두뇌한국(BK), 인문한국(HK) 같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에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학회 또한 너 나 할 것 없이 학술대회지원, 학술지발간지원의 참여로 가난을 벌충하려 하고 등재학술지 유지를 위해 고투한다. 등재(후보)학술지가 아니면 학술지로서 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정권이 등록제도 및 납본제도를 통해 미디어, 문예, 학술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할했던 방식이 자꾸 연상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인가. 연구공동체 모두가 조삼모사식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무제한적 내부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 장을 떠나지 않는 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이 서글프다. 연구공동체 모두가 올해도 연구재단 공고에 모든 관심과 눈이 쏠릴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재단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구원자/훼방꾼, 두 얼굴의 제도적 권력을 선용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응일까? 제도권 권력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우회로는 그 어느 것이

든 효력이 없고 자기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 큰 문제는 연구재단에 갇힌 연구공동체 내부의 풍경이다. 연구재단이 부과한 정책적 조건과 논리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내면화 하여 자율성.주체성을 스스로 상실해가고 있다. 학회의 실태를 보자. 지금-여기 학회 일반이 처한 현황을 직시하면 암울함이 앞선다. 학회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욱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다. 말 그대로 연구, 발표, 토론의 광장으로서 자율적 연구공동체의 위상을 지니는 가운데 학문의 발전과 학계의 네트워킹을 형성.강화하는 유력한 발판이다. 특히 후자의 역할은 1990년대 이후 다양한 학회가(현대문학 관련 학회 포함)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하고 양적 성장을 거듭한 것에 대응해서 그 기여의 폭을 확대시켜 나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현대문학 연구자 대부분이 학회를 통해서 학문 활동에 동참한다. 학회에 참여하는 동기는 제각각이나 적어도 학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욕망이 가장 큰 동기일 것이다. 이전에 우세했던 취업(교수 임용, 연구소 취업 등)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동기도 여전하다. 오히려 강화된 면이 없지 않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확대된 상황의 역설일 것이다.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 이 동기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 학문공동체로서 학회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진단이 일반적이다. 학회 전반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얘기 또한 여기저기서 발신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가 가중된 바 없지 않으나 그 이전부터 위기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난 바 있다. 그 원인이야 복합적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회의 수가 너무 많은데 있다. 학술단체들의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AKAS)에 현재 675개의 학술단체(학회)가 등록되어 있다(사회과학 199개;30%, 인문학 126개;19%, 공학 85개;12% 등). 이 AKA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각 분야 소규모 학회까지 고려하면 1000개가 훨씬 넘을 것이다. 문학 관련 학회 상당수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총괄 현황>(2022.6.1. 기준)으로 접근해보면, 우수등재지 71개(인문분야 13), 등재지 2,342개(인문 559개), 등재후보지 257개(인문 42) 총 2,670개(인문 614개)로 집계되어 있다. 연도분야별 등재(후보)지 선정을 보면, 등재후보지는 1998년 61개(인문 8)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2003년 340개(인문 105)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최근 3년간 평균 121개(인문 18개)가 새로 선정되었다. 이와 연동되어 있는 등재지 선정의 연도별 추이도 마찬가지여서 2001년 119개(인문 14)를 시작으로 2015년 219개(인문 67개)로 정점을 이룬 뒤 축소되나 최근 3년간에도 평균 158개(인문 30)가 선정된 바 있다. 등재지 현황은 인문학(대분류)/한국어와 문학(중분류)

분야는 91개, 기타인문학(중분류)은 91개, 문학(중분류)은 13개로 각각 파악된다. 발행기관은 대학부설연구소와 학회의 비율이 2:8로 추산된다. 문학과 유관한 학회(학술지)가 너무 많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지점이다.

문학과 관련한 학회가 많다는 것은 양가적이다. 각 학회의 처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총량적으로 학회 본연의 기능이 진작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튼실해졌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실제 2000년대 들어 10여 년간 상당수 학회의 학술대회장은 발표의 세션이 다양하고 풍부한 가운데 하루 종일 대학원생을 비롯해 참가자가 넘치고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뒤풀이는 더 흥성이며 또 다른 토론장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신진연구자들의 충원이 원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술대회 개최가 줄고 열기는 급속도로 식었다. 발표자(토론자) 외의 지적 호기심을 지닌 단순참가자를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 후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학술대회로 전환되면서도 큰 변화가 없다. 종합선물세트식 학술대회도 문제다. 다양한 세션과 20명 내외의 발표자로 편성된 단일학술대회가 언제부턴가 잦아졌는데, 학술적 토론(소통)보다는 학회지 논문 확보를 위한 변칙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학회의 또 다른 활동 영역인 학회지 발간의 현황도 심각하다. 심각보다는 위태롭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싶다. 학회지 논문 투고가 극히 저조하여 기한(재)연장 모집이 빈번하다. 그 현상이 학술지별 부익부 빈익빈을 수반하며 점점 확장하는 추세다. 오싹하지 않은가? 원고난, 우리가 익히 목격했던 과거 (문학)잡지 발간 또는 재생산의 치명적인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던 원고난이 부지불식간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글쓰기를 위협하는 검열도 없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예전처럼 한 사람이 필명을 바꿔가며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조차 든다. 학술지 지면 총량 대비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인한 문제인데,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학(원) 내 인문학의 입지가 날로 축소되다 못해 유관 학과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신진연구자의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연구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연구능력을 배가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증요법이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학술지 발간 횟수를 줄이는 것인데, 이조차 학술지평가제도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술지평가를 위한 증간의 역습이다. 퇴로가 막힌 지독한 딜레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로부터 파생되는 부작용들이다. 상식적으로 투고논문의 수급(需給) 격차가 커질수록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의 차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목도한다. 학문적 자극을 주는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가 연구사 검토의 부재와 기존 연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의 변주, 연구리포트 혹은 기획서 수준 등 거론하기가 참 민망하다. 더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새로운 연구(주제)라고 힘써 강조하는 대목을 접하면 아찔하다. 논문 편수 쌓기에 치중된 기능적 연구가 범람하는 형국이다. 오리지널한 연구논문이 찾아보기 매우 드물다는 것이 중론이다. 심사 절차를 거치되 검증(간접 소통)이 연구를 자극하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작용했던 긍정성도 점차 퇴조한 느낌이다. 게다가 발표된 논문이 거의 읽히지 않는다. 또 읽고 싶어도 주기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논문이 많아도 너무 많다. (어)문학 관련 학술지를 어림잡아 100곳으로 추산하면 연간 평균 3회 발간(매호 7~8편 수록) 그러면 대략 매년 2천5천 편이다. 어떤 주제의 논문이 발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벅차다. 다른 한편에서는 석.박사학위논문도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이 숫자도 만만치 않다. 몇몇 학회지에서 추천석사논문을 소개하는 기획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얼마나 읽힐까?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읽어야 할 의무는 없다. 허나 최근의 연구 동향, 특히 자신이 관심을 갖는 연구주제와 밀접한 최신 연구를 검토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의 성과만을 편의적으로 참고해서 연구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경험상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다. 문학 연구의 외연이 확장된 추세를 감안하면 문학 외의 유관학술지에 발표된 결과물까지 손이 미쳐야 하는데(어떤 면에서는 문학연구의 갱신에 더 유용한 참조점이 많다), 이를 기대하기란 점점 어림없다. 학술지의 난립과 부실화, 논문의 총량적 비대화/질적 저하의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 고질화되기 전에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묵과하는 것은 공도동망(共倒同亡)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제도를 폐지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학회의 과도한 양산 및 그에 따른 학술지 범람의 저변에는 학술지 등재제도와 학술지 평가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등재지 제도는 참 고약하다. 이 제도가 갖는 유용성이 이제는 희박.실종됐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데, 역설적으로 학회들은 이 제도에 의존해 학술적 영향력을 보존 내지 확대하고 있는 기묘한 형국이다. 학술지 등재제도를 유지시키는 주된 근거는 업적평가의 객관성이다. 이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전제하에 대학을 포함한 학술계의 의사(疑似)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학이 더 완강하게 이를 고수하려고 한다. 학술지별로 점수의 차등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각해보면 분할의 오류, 즉 (우수)등재지라도 거기에 실린 논문이 질적으로 낫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물

론 등재지 제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식의 생산-유통-수용 등 학술생태계의 제도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는 학회가 유지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연구재단의 입장에서도 국고 지원을 받은 연구의 수행결과가 재단 관리하에 있는 학회(지)를 매개로 수렴 및 확산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학술진흥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연구재단이 등재지 제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재단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으며, 모든 평가는 전문가라는 동업자들이 엄정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쩌면 그 불간섭주의가 연구재단 권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힘인지 모른다.

문제는 업적평가 수단이라는 '기능성'에 심하게 치우쳐 있는 학술지의 존재방식과 그것이 학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데 있다. 아마도 등재지 제도를 폐지하면 많은 학회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어문학 통합 학회(지)가 제일 위험하다. 기존의 정형화된 대학 학제 및 특정 대학에 뿌리를 두고 탄생한 이 유형의 상당수 학회는 그 정체성이 시대적.학문적 동향과 정합성을 갖기가 어렵고 또 물리적 통합 이상의 질적 발전을 꾀하기가 취약한 내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부당한 간섭이라면 용서하시라). 이런 맥락에서 현행 학회 난립의 유일한 처방전이 등재지 제도 폐지라는 말에 얼마간 수긍이 갈 수밖에 없다. 위조 학술지(Hijacked Journals),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 대량발행 학술지 등 부실학술지들이 등장해 학술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현상도 결국 연구업적 평가라는 기능성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학술지에 편승해 부실 학술활동을 하는 비윤리 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구조적 요인에 다시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이런 유형의 학술지가 발간되기는 제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나 유사한 행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지금과 같이 연구재단과 학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당분간은 존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재지 제도의 기능성이 심화될수록 교묘한 방식의 유사 행태가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연구재단/학회의 관계를 단절하자는 것은 아니다. 연구재단이란 제도적 기반조차 없으면 연구자는 물론이고 학회도 생존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연구재단의 인문학 지원 확대를 비롯해 그 기능을 선용할 필요성이 더 증대되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연구재단의 1년 예산 7조7000억 중 인문사회학술연구 지원액은 약 2700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이공분야 연구개발비는 약 3조6000억 원이다. 더구나 지정학(geopolitics)에서 기정학(tech-politics)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이에 따라 국가R&D 전략성 강화가 국가생존의 시급한 과제로 강조되는 국면에서 인문학 지원액이 늘 리는 없다.

가난한 문학연구자와 학회가 기대할 수 있는 지원액은 얼마 안 된다. 소규모의 지원액을 놓고 연구자와 학회가 상호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다.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 이 구조가 강화될수록 국가(연구재단)/대학(원), 학회, 연구자 간 비대칭적 관계는 심화될 것이다. 한국학술의 실질적 기반이자 관장자로서 연구재단의 위상이 강화되는 한편 당연히 후자의 소모적 경쟁도 날로 치열해질 것이다. 이 추세로 가면 새로운 버전의 관학협동체제가 한국학술계를 지배하는 경향이 더 확고하게 정착될 것이다. 이미 학술연구의 내용, 영역, 방향 등 전반이 점차 연구재단의 틀 안에 갇혀 규율되고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형편으로는 돌이키기가 어려운 흐름인 듯하다.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매우 좁다. 다만 연구자, 학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같은 학술 환경을 어떻게든 우리 중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 지점에서 학회 무용론/강화론이 거론된다. 무용론은 현재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학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비용 나아가 기회기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에서 제기된다. 문학 연구자 개인으로 보면 복수의 학회에 가입해 때가 되면 간사를 비롯해 중요 직책을 맡아 학회를 위해 봉사하는 관행이 여전하고 그 관행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연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학회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관론도 가세하고 있다. 그렇다고 학술(회)의 공공성이란 명분론을 앞세워 강조하기가 어려운 시절이다. 참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자가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해서는 학회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 증대된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학회무용론도 학회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운영방식과 현실적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우려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학회 무용론이든 강화론이든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적어도 학회가 해왔던 그동안의 역할이 시효를 다 했다고 선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학회를 위상과 그 기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절실하다.

그럴 때 학회 내부의 실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끔 만든다. 학회의 활동 영역은 의외로 협소하다. 대체로 (정기)학술대회, 학회지 발간 정도다. 주력 사업이 이렇다보니 연구재단과의 유착관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상허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등 일부 학회가 정기적인 집담회 형태로 연구자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술 활동을 진작시키는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학술대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에 편중된 학회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학회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문 위주의 학회지 지면을 개선하는 일도 필요하다. 알고 보면 이 같은

관습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새로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다.

이와 관련해 학회(지)의 운영방식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 회원들의 회비로 학회가 운영되는 것은 학회의 태생적 본질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학회와 회원 간의 관계설정은 새롭게 개편·정립해야 한다. 학회의 위상과 그 기능상 학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학회의 회칙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한 면이 많다. 먼저 회원의 논문 게재에서 게재비용 징수의 상례화(연구비지원대상인 경우는 대부분 동의한다), 나아가 초과 게재료 징수는 끔찍하다. 특히 후자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터무니없는 일이다. 120매 이상을 초과 게재료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약탈자적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난하니까, 또 규정이니까? 게재비를 징수하지 못해 학회지 발간이 힘든 처지라면 그 학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이제는 저작권양도동의서까지 요구한다. 학회가 회원의 저작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물론 전체 회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회지 OA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별개다.

일례로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2020년 발족한 '지식공유연대'(새로운 학문공동체와 지식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연대)의 학술주권 회복운동에 동참한 문학관련 학회는 극소수다. 상허학회, 대중서사학회, 한국여성문학학회 등이 출발 때부터 같이 했고 이후 몇몇 학회가 동참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자저널을 독점한 학술출판사(업자)에게서 매년 300만 원 내외를 받는 저작권료 수입 때문이다. 그 외의 이유는 없다고 본다. 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 직접 논문을 올려야 하는 수고로움이 더해지나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결국 학회(원)의 의지의 문제다. 이 돈으로 학회 운영의 재정을 충당하는 현실도 서글프지만, 그 이유로 자신이 쓴 논문을 구독료를 주고 구독하는 연구자의 비애를 결과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다소 격한 표현이나, 학회의 무책임과 악랄함 아닌가. 국내외 학술지에 자신이 쓴 논문을 실을 때 돈을 내야하고 구독하면서도 돈을 내는 이중 지불구조가 연구생태계를 좀먹고 있는 현실에 분노해야 하지 않는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 해외 학술출판사의 횡포로 인해 정상적인 학문적 소통체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은 당장 대학도서관 전자저널 구독료의 매년 가파른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의 예산이 부족해 당장 필요한 학술저널을 구독하지 못하는 대학원생 및 교수가 유명 대학에 재학 중인 선후배들에게 아이디를 빌려 쓰는 편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가난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쳇말로 돈도 없는데 가오(자존심)까지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저작권료를 바라고 연구논문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더라도 이런 부당함은 학회가 앞장서 막아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 아닌가. 우리가 부주의해서 한편으로는 묵인했던 관행을 깨고 학술주권을 찾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상허학회를 비롯해 여러 학회가 과감하게 오픈 액세스(Open Access, OA) 운동에 동참해 창간호부터 장벽 없이(이용료나 저작권) 연구 성과를 개방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연구를 학회지 발간 즉시 공개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킨 것은 회원들의 논문이 퍼지고 인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한 것이라는 점에서 학회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자세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중 지불구조, 해외 학술지 구독 비용의 병폐 등을 막는 대안으로 모색.시행되고 있는 오픈 액세스 추진은 어쩌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학회의 정체성과 그 기능을 재설정하자는 것으로 모아진다. 연구자 및 학회의 가난이 원죄라고 한탄만 하기는 당면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학회의 파국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현대문학자대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토론하며 방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람이다. 우리 현대문학 연구자는 근대전환기에 지식인상으로 강조된 권력과 시대에 맞서는 지사도 아니고(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회(활동)가 해방직후나 1980년대처럼 사회변혁 운동에 일익을 담당할 만한 처지도 아니고 역량도 없다. 그저 학회를 매개로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기대하고 또 그 바탕 위에서 나의 연구가 인문학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구하는 이 시대의 약자이자 서생일 뿐이다. 학회가 계륵이 되는 것을 막자.

이번 전국현대문학자대회를 접하며 나를 포함해 상당수의 연구자는 1946년 2월 임화 주도의 전국문학자대회를 떠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오늘의 자리가 엄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시대가 부과한 과제를 짊어지고 문학의 진로를 정립하기 위해 고투했던 그 역사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현대문학연구가 자생적 학회를 중심으로 진작된 세월이 30년을 경과했다. 통상 30년이란 단위가 갖는 관습적 의미는 세대의 교체라는데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다. 30년의 역사를 이끌었던 주역들은 어느덧 제도권에서 또 연구공동체에서 퇴장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체들이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할 때다. 30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공과를 넘어서는 길을 개척하고 가꿔 갔으면 한다. 그 비전에 공명하며 같이 하는 영광을 있기를 소망한다.